

I.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적인 성장의 둔화,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비용(공공부담 등)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출산 여부 선택의 문제로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실제 현재 몇몇의 지방은 출산율이 0.1에 미달하여 지역 고령화 비율이 높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법령을 현 상황에 맞추어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자주 꼽히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비 부담, 주거 불안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II. 본론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주요 문제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데, 출산 이후 직장 복귀 과정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등장이 두려우거나, 상환 의무 있음 같은 특은 회사 권유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법률 상으로는 육아휴직을 남성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직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나 복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첫째,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상 모든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정부나 행정부의 제재가 부족하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의무적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률을 3%에서 90%까지 끌어올린 사례가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부인 인도가 육아휴직을 쓰면 혜택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생아의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저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두번째 개선 방안은 영유아 보육법의 개선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하면서 갈수록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의 보육 인프라 격차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차이의 간극은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는 우선적으로 보육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이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별 반납금이나 돌봄비용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보육 지원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지역 간의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 시설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비용부담이 적지만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실상이다. 특히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나 농어촌에 보육 시설 보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를 확대하여 보육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채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긴급돌봄과 야간 돌봄 서비스의 국가적 지원 및 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립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존재하므로 기존의 편익적인 보육 체계 (9시 등원, 18시 하원) 만으로는 부모들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탄력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주거비 부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높은 주택 가격과 전세금 부담으로 출산은 물론, 결혼까지 부담을 느껴 미루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주거지 근처의 교통, 교육, 보육 시설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이 우선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주택을 장기로 임대해주는 정책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출산과 양육은 최소 20년간 장기적인 시간을 관할로 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III. 결론.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는 단기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가의 포괄적인 지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주로 현금지원이나 경제적 혜택이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은 꺼리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양육과 돌봄의 부담, 주거 환경의 불충실성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혁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법을 개정하여 육아 휴직의 자취를 사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여 국가 차원의 보육을 강화하여, 정부의 임대주택 혜택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준다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단편히 출산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책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되어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